

## 원평 사격장 擴張계획에 住民 강력반발

### 주민대책위, “밤낮없는 사격 이전 참을 수 없다” 호소 軍부대, “피해조사 했지만 이렇다 할 피해 없다” 주장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시하는 전차포 사격으로 인해 사람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그런데 또다시 사격장을 확장하고 신형 전차포를 도입, 사격훈련을 실시하면 소음과 분진이 더욱 증가한다. 원평 전차포 사격장을 이전하라”

원평 전차포 사격장 확장계획이 알려지면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주민 1천500여명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차포 훈련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면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평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동면 20개리 이장협의회 장단이 주민대책위원회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주민과 군부대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지난 6월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진정서 형식으로 작성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방부, 관련 군부대 등에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연곡5리 마을과 인접한 원평 전차사격장을 1차(1993년 500m), 2차(1998년 500m) 탱크 사격장 확장 공사로 수십년간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수십차례 진정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는 커녕 그 피해

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도시민의 작은 불편에도 직접 정부가 나서 수 십억원을 투자하면서 소음과 진동 등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주민들의 뒤통로만 안겨주는 정부와 군 당국의 처사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원평 사격장 탱크 진입을 차단하겠다”면서 “이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군부대 또는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군 부대측은 답신을 통해 “훈련간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된 방음벽(130m)내에서만 사격을 실시하도록 통제하겠다”면서 “방음벽과 도로포장 등은 중기 계획(2010년)에 반영해 추진하고 사격장 주변 환경개선 일환으로 4천주의 방음림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에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훈련장에 세분장을 옮겨까지 설치할 것이며, 도로 포장을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군부대측에 답신에도 주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병현 주민대책위원장은 “사격장을 확장할 때마다 사단장이나 여단장은 방음벽 설치나 토사유출방지, 방음림 조성 등 주



주민대책위원회는 군부대측 주장과 달리 전차포 사격으로 인해 주택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촬영한 연곡5리 길가주택 주택이다. 전차포 사격으로 건물의 균열이 생기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쇠파이프 보강공사를 했다고 주민들은 설명하고 있다.

민피해 대책소스를 약속했지만 이루어진 게 없다”면서 “이들 부대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나뭇잎라 하고 또 다른 부대장이 오면 또 약속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차포 사격이 과거에는 95mm였으나 점차 105mm, 120mm 등 성능이 향상되면서 사격장도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군부대측은

아무런 피해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차포 사격을 함으로써 건물균열은 물론 가축유산, 토사유출, 학생공부 방해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보고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관련 군부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전차포 성능이 좋아져 사거리를 감안해 사격장을 확장할 계획은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

다”면서 “지난 5월 육군본부에서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지만 건물 균열 등 주민피해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방음림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원평훈련장에서 연 125일만 사격을 실시하지만 민원인들이 피해를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지금 포천은 이렇다 ㉓  
포천시의의회 어떻게 변하고 있나

## 行監 인터넷 생중계 의원과 집행부 변화

### 의원 전문성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 모색해야 각종 행사장 참석자제하고 민원현장 찾아야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함으로써 감사자와 피감사자간 불필요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의의회는 지난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로 표기)를 실시하는 장면을 포천시 본청과 읍면동 및 사업소 공무원들이 인터넷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인터넷 실시간 중계방송은 시의회가 행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실시간 중계방송은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과 피감사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계방송을 의식해서인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가기 이전에 질문할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행감에 임하는 자세가 변했다. 또 과거 육박지르기식 질문과 고함어 사라고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피감사자인 집행부 공무원들도 중계방송을 의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포천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실과장 등 집행부 공무원들도 무성의한 답변이 없었고 시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껏 답변했다.

그러나 행감의 근본 목적인 행정행위의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시정 혹은 대안제시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행정이 운영되도록 유도하는데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는 시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 의회는 행감을 실시하기 이전에 감사할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주민, 기타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의원을 보좌하는 시의회 전문위원은 고차 3명이다. 전문성이 없는 의원들이 방대한 시 행정의 자료를 분석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 자신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그룹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원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행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적절한 시간분배가 필요하다. 의원들은 각종 행사에 초청을 받는다. 행사장에 다녀느라고 정작 필요한 주

민민원이나 행정의 감시감독 기능은 등한시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의원 스스로 행사장을 찾는 것을 자제해야 하겠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측의 배려도 필요하다. 읍면동 단위의 행사 혹은 작은 단체의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의원 초청을 자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역구 의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행감 기간동안에 행사개최를 자제하든지 혹은 불요불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에는 초청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는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다. 의원들은 행감을 통해 잘못된 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일부 의원에게는 하지만 열의가 없는 사람도 있다.

이번 시의회 행감의 경우 8명의 의원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이 빠진 가운데 6명으로 행감특위를 구성해 실시했다. 또 진행을 맡은 행감특위 위원장을 제외하면 5명의 의원이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하는데 방대한 시 행정을 제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만 의원들의 행감에 대한 열정으로 인한 부족의 한계를 일부 극복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비교하면 의원들의 공부하는 자세는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일부 의원은 아직 행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번 행감은 감사대상으로 분청 19개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14개 읍면동 218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또 행감기간 역시 7일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방문 1일을 제외하면 4일만에 거쳐 218개 업무를 감사해야 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감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부이긴 하지만 인터넷 실시간 중계로 의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변하기는 했다. 아울러 피감사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감사에 임하는 모습도 많이 변하고 있다.

이강민 의장은 “80여 공직자들이 실시간 인터넷 중계를 통해 행감 현장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면서 “행감이나 분회의 장면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전 시민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연곡리 주민과의 인터뷰

##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격장 폐쇄요구”

### ▶김병현 주민대책위원장

관광객들이 왔다가 전차포 사격 소음을 듣고 잠이 일어난 줄 알고 그냥 돌아간다. 주민피해에 대해 협상이나 보상차원이 아니라 사격장을 폐쇄해 달라는 요구다.

### ▶이승업 주민대책위원회 총무

포 소리가 너무 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부대와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달라.

### ▶정봉영 연곡1리 이장

사격장 소음과 진동 피해로 사람이 살 수 없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

### ▶김승진 연곡3리 이장

수복된 이후 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은 해결된 것이 없다. 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지역정착을 살려달라.

### ▶김창재 연곡4리 이장

사격장으로 인한 직접 피해를 입는 곳은 연곡2리와 5리다. 다른 지역은 간접 피해를 보고있지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피

해는 대단하다.

또 수십년간 피해를 봤고 93년과 98년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기욱 연곡5리 노인회장

연곡1리와 연곡2리 주민들은 사격장이 떠나든지 주민이 떠나든지 해야지, 주민들은 살 수 없다.

### ▶박병식 사무국장

사격장을 이전할 곳이 있다. 사격장을 유지하려면 군부대장이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길 바

라한다. 군부대장은 살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조성달 주민대책위원회 축산분과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피해가 막심하다. 전차 사격장이 이전하면 이동면 주민 전체가 안심하고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유신 연곡2리 이장

포사격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게 20여년이다. 군부대장들은 자기 임기 동안만 주민들에게

피해방지 약속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한다. 서울 사람이 공장이나 다른 용도의 토지를 매입했다가도 매도하고 다시 돌아간다.

### ▶이미경 연곡5리 부녀회장

초등학교 3명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걱정된다. 새벽과 저녁에 사격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학생들은 귀에 이상이 생겨 수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7월 1일, 경기-서울 통합환승할인 실시

# 가심환이 같아라자!

### 내리실 때 카드를 대면 최고 40% 할인됩니다

- 1 서울의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사이에만 이루어지던 환승할인제가 경기도의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확대
- 2 경기,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을 여러번 갈타다도 이동거리만큼만 요금 적용(10km까지 기본요금 900원, 이후엔 5km마다 추가요금 100원씩 부과)
- 3 갈타지 않고 시내버스만 타도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요금 적용(적용기준은 동일)
- 4 경기도내 직행좌석, 좌석, 시내버스 사이에 이루어지던 정액(400원) 환승할인은 현행 그대로 유지
- 5 시계 내 장거리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다소 인상될 수 있음
- 6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249-300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넷(www.gg.go.kr)에서 확인하세요